



유럽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에게서 듣는다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 6~7면

이호중 서강대 교수가 말하는  
**범죄의 정치경제학**

▶ 9면

242 회담과 한미연합훈련  
**열강의 힘자랑  
무대가 된 한반도**

▶ 3면

7·28 재보선 결과  
**민주연합은 반MB의  
대안이 못된다**

▶ 2면

발행인\_ 김민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주)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남창동 205-146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31

Left21.com

2010년 7월 31일 ~ 8월 13일 | 제37호 | 값 1,800원

레프트21

유출된 문서를 통해 드러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상

# 나토군과 한국군은 즉각 철군하라

미군 문서가 9만 건이 넘게 유출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유출된 문건들은 미국이 이끄는 나토군이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보여 준다.

이 문건들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 말까지 미군과 영국군의 폭격과 총격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죽었다.

일부 문서는 오직 탈레반 지도자들만 “사살 또는 생포”할 목적으로 창설됐다는 미군 비밀 부대, ‘태스크포스 373’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부대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3백69명을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어느 작전에서는 어린이 일곱 명이 죽기도 했다.

실제 사망자 수는 십중팔구 더 많을 것이다.

조지 부시가 9년 전에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에게 오직 죽음과 파괴만을 가져왔다.

버락 오바마와 그의 지지자들은 지난해에 오바마가 집권한 뒤로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주장한다. 가증스러운 거짓 말이다.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에서 학살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나토군은 7월 23일에도 헬만드 주 상진에서 민간인 약 45명을 죽였다. 이는 오바마 집권 이후 18개월 동안 서방 군대가 자행한 수많은 학살 중 최신 사례일 뿐이다.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점령의 목적은 애당초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해방이 아니라 미국 패권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점령의 야만성은 이러한 목적 자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여론의 압력에 밀려 점진적 철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점진적 철군은 고통을 연장할 뿐이다.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와 정의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은 병력을 당장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 민중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런데 7월 21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는 “한국 측이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거버넌스·개발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공동성명은 한국군 파병 임무에 애초에 없던 “치안”을 포함시켰다. 전투병 파병 가능성을 은근슬쩍 흘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그러나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해방이 아니라 비극만 심화시킬 뿐이다. 한국군은 즉각 철군하라.

▶ 관련기사 4면 ‘유출된 문건들이 보여 주는 아프가니스탄의 참상’



법원, <레프트21> 판매자들에게 벌금형 선고

##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

지난 5월 7일 저녁 서울 강남역에서 등록 정기간행물 <레프트21>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된 6명이 최근 무려 8백만 원가량의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이들은 벌금고지서를 받고서야 자신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23부는 이미 6월 23일에 약식 재판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경찰은 연행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통해 부풀리고 있는 “안보 위기”는 “사기”라는 <레프트21> 기사 내용을 문제 삼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일 수 있다”,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며 위협했다.

그러나 합당한 근거를 찾지 못하자 신문판매 행위를 ‘집회’로 간주하고 집시법 위반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등록 정기간행물을 거리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집회’로 간주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

경찰의 <레프트21> 판매자 연행과 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판매 행위를 집회로 보는 것은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판매 행위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가

지고 있는 있는 여러 명이 모였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집시법을 적용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여러 명이 모였다는 것만으로 집시법을 적용한다면 집시법이 원래 규율하고자 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히 촛불 정국 이후로 집시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해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많아졌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법원은 같은 건으로 기소된 6명 중 2명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이나 되는 벌금을 선고했다.

그 두 명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지 않는 목비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말고 다른 사람과 특별한 차이점은 없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과심죄’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나머지 4명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내용은 목비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 12조). 그리고 목비권에는 당연히 신분을 밝히지 않을 권리로 포함된다. 경찰이 <레프트21> 창간부터 지금까

지 1년 반 동안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왔던 거리판매를 새삼스레 공격한 이유는 정부의 정치 위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북풍’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던 상황에서 <레프트21>이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듯하다.

### 법정 투쟁

벌금형 선고는 앞으로도 <레프트21> 같은 좌파 언론이 정부의 추악하고 무능한 단면들을 드러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아직 임기가 절반가량 남았지만 벌써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도 더욱더 탄압에 의존하려 할 것이다.

이미 한국진보연대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마녀사냥 리스트에 올랐다. 7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기무사 사찰 피해자인 안중현 학생도 실행 3년 6개월이라는 유례 없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레프트21>은 결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자유 탄압에 순순히 당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벌금형을 받은 <레프트21> 판매자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 투쟁을 벌

일 것이고,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레프트21>도 6명의 투쟁을 도울 것이며, 탄압에 굴하지 않고 연대를 확산해 나갈 것이다.

이미 7월 25일에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현재 경찰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마저 미신고 집회로 규제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기간행물의 판매 행위까지 집회로 간주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정부의 진보언론 탄압과 표현의 자유 억압에 맞서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2일부터 나올 동안 열린 진보포럼 ‘참시즘2010’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법정 투쟁 후원 모금에 동참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진

▶ 관련기사 2면

여름 휴가 기간을 고려해 이번 호는 16면이 아닌 12면으로 발행합니다.



세상을 읽는

<조선일보>: “청와대 있을 때 고소를 많이 해서 ‘고달’(고소의 달인)이란 별명까지 생겼다”  
전 홍보수석 이동관: “물러나면서 다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번엔 ‘쇼달’[쇼의 달인]이라고 하더라”

뭘 해도 욕먹는 MB맨들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도 따갔을 것”

강용석의 천기누설?

“누드 사진을 찍을 생각이 있느냐? 지금 찍으면 예쁘겠다. ... 나랑 의장님이 말하면 그냥 ‘네~’하면 되는 거지”

민주당 소속 고창군수

이강수가 여직원에게

“[이명박이 월드컵에서] ‘북한이 이겼으면’이라고 한 것은, 옆집 남자에게 제 자식이 맞아 죽었는데 다음 날 그 아버지가 ‘그래도 그 옆집 아들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는데’라고 말한 것과 같다”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 이상훈

“정부는 북한 식당 이용자에 대해서 입국 즉시 ‘남북교류협력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

해외 교민들에게

한국대사관이 보낸 메일

“젊은 애들 ... 이런 정신 상태로는 나라 유지 못 한다.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

외교부장관 유명환의 정신 상태

“민주노동당은 한미동맹의 철폐를 주장하고 어떤 대안도 없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 대안 없는 반미”

광주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색깔론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지난 호 <레프트21> 온라인 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섯 기사는 <레프트21> 판매자들 별금 판결 규탄한다, '현직 교사'가 김상근 교육감에게 보내는 글, 'KBS 파업에 지지와 연대', '이명박 정부: 부패, 불의, 분열', '진보 교육감이라면 김승환·민병희 처럼'이었습니다.

www.left21.com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르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가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해와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7·28 재보선 결과

# 반MB 민주연합 노선의 실패

7·28 재보궐 선거 결과는 '민주당 중심의 물지마 반MB 연합'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한나라당은 원래보다 네 석이 늘었다. 이명박의 심복들인 이재오와 윤진식이 모두 당선됐다. 반면, 민주당은 세 석이나 줄었다.

투표율과 득표율 등을 고려하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유권자들은 위기감 속에서 결집한 반면 반MB 정서는 결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반MB 정서가 줄어들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도 4대강 사업과 친기업 반민주 정책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정부 여당 인사들의 온갖 추태와 막말까지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과 차명진의 최저생계비 관련 '황제 식사' 발언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몇몇 해외 공관은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교민들에게 북한 식당을 이용하지 말라고 협박했고, 외교부장관 유명환은 '야당 찍은 젊은이들은 북한으로 가라'는 막말을 했다. 천안함을 계기로 한 북풍도 계속됐고 한미전쟁동맹도 동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 시늉

이처럼 반MB 정서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를 면하고 오히려 성과를 낸 것은 개혁과 진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반MB의 대안으로 제시된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후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잘해서 그 당을 찍었다는 사람은 2.4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젊은 층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을 찍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계속 투표장에 나올 마음이 싹 달아나게 행동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였던 서울 은평에서 민주당이 '왕의 남자' 이재오의 대항마로 내놓은 후보는 진보적인 것은 고사하고 개혁적이지도 않은 장상이었다.

장상은 8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무총리가 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도 그의 총리 취임에 반대했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의 민주연합 사람들에게 전혀 대안적 연합이 되지 못했다.

다. 한나라당의 부패한 특권층 후보들과 차별점을 찾을 수 없는 장상은 반MB 정서를 대변할 수 없었다.

충주에서도 민주당 후보는 한나라당 출신 무소속 후보와 '반MB' 단일화를 했다.

더구나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친기업 반민주 정책들에 단호하고 일관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다. 싸우는 시늉만 하면서 이런 쟁점을 선거 득표에 이용하려는 태도만 보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민주당 소속 고창군수의 성희롱에 눈감은 민주당은 한나라당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4대강에 찬성하는 전남도지사 박준영을 또다시 공천해 연임하도록 한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4대강 반대 선거"라고 부른 것도 위선이었다.

심지어 광주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안도 없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 반미"라고 민주노동당에게 색깔론 공격을 하기까지 했다.

결국 지방선거 때 이명박 심판을 위해 민주당에 투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재보선에서는 그런 열의를 가질 수 없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패배로 불신 받는 '구 집권당'임을 증명했다.

## 존재감

이런 민주당과 물지마 반MB 연합을 하자는 노선도 실패했다.

서울 은평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진보 후보 단일화는 팽개친 채 민주당의 반MB 범야권 단일화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 '수도권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이정희 신임 대표의 말과는 반대로 서울에서 민주노동당의 존재감이 더 취약해졌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진보 후보 단일화를 외면하는 바람에 진보 후보로 나선 사회당 금민 후보는 5백 표도 얻질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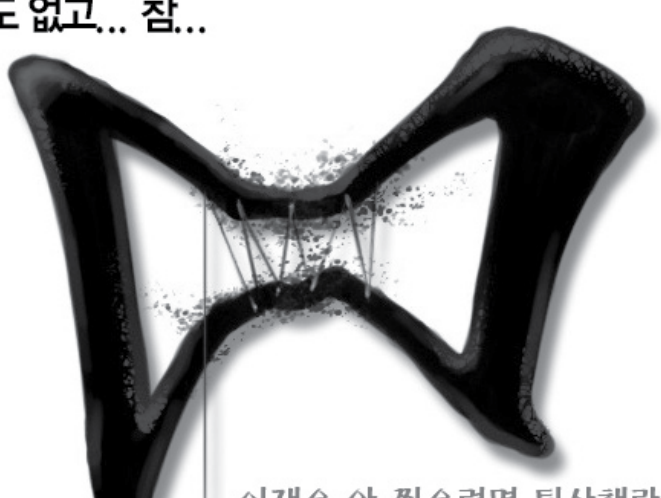
광주 남구에서 44퍼센트나 득표하면서 선전한 오병윤 후보의 '민주당 심판론'이 충분히 먹히지 않은 것도 민주노동당이 전국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아류로 비취진 때문일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서울 은평과 광주

**콜라주 33**

콜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퀘맬 수도 없고... 참..**



**이재소 안 찍으려면 퇴사해라**  
**젊은 애들 북한 가서 살아라**  
**6천3백 원짜리 황제의 삶을 살았다**

**일루전**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 선고받은 6인 대책위’ 대표 김지태 인터뷰

## “진보적 주장 문제 삼는 탄압에 위축되지 않겠다”

경찰에 잡혀 갔을 때, 그들은 단지 집시법 관련 사항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발행인 김인식, 기자 누구누구와 아는 사이냐” 등을 물어보며 다른 정보까지 캐려고 했어요.

약식명령문 내용 중 ‘공소사실’을 보면, 우리가 ‘신문 형식의 유인물들을 건네주’며 미신고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명백히 우리가 신문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서도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또, 공소사실에는 우리가 당시 신문을 판매하며 한 주장의 내용까지 상세히 요약돼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우리 주장의 진보적이고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주시했고, 우리를 사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행되기 2주 전부터 경찰이 ‘강남춧발’이 매일 여는 집회에 와서 우리에게 대해 자꾸 캐물었다고 해요.

이런 정치적 공격에 맞설 때 지지와 연대를 확대하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



5월 7일 <레프트21> 판매자들을 강압적으로 연행해 가는 경찰들

잖아요. 6명이 지지와 연대를 확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건 당연히 싸워야 한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투지를 다지고 있어요.

이번에 '공소사실'에는 단지 천안함 판

련 주장만이 아니라, 긴축에 맞선 그리스 저항을 소개한 주장,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하자는 주장도 인용돼 있어요. 진보적인 주장을 전반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남구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던지면서 진보적 대중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오병윤 후보의 선전과 치열한 양당 구도 속에서도 박인숙 후보(인천 계양)와 박승흡 후보(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가 각각 7.6퍼센트와 6퍼센트를 얻은 것은 민주당이 아닌 진보 대안을 바라는 대중적 정서를 가늠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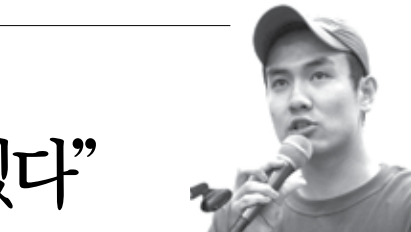
결국 '반MB 대안'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다.

내분과 위기로 치달던 이명박 정부는 7·28 재보선 결과를 한숨 돌리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박사모가 이재오 낙선 운동을 벌인 것이 보여 주듯이 이명박 정부의 위기와 분열은 계속될 것이다.

이재오는 2008년 총선 때 이상득 불출마를 권유한 사람들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불안정한 경기 회복이라는 정치 위기의 뿌리도 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하반기 이명박 정부의 공세에 맞설 투쟁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교훈을 얻어 '물지마' 반MB 민주연합이 아니라 진보대연합으로 투쟁과 선거에서 진보 대안을 구축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김문성



경찰은 우리처럼 <레프트21> 판매를 통해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좌파적 주장을 하는 행위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정부와 법원은 우리가 이 문제로 위축되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섯 명은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신문을 판매하며 진보적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독자들이 우리의 싸움에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진실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신문을 주변 지인들에게 권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인터뷰·정리 최미진

소송 비용 마련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 후원 계좌: 예금주 신명희

우리은행 1002-337446-442

● 문의 전화: 02-777-2792

● 이메일: support6@jinbo.net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중국의 맞대응 군사훈련

# 두 열강의 힘자랑 무대가 돼 버린 한반도

한미 양국이 동해에서 벌인 군사훈련으로 한반도와 그 인근 지역에서 긴장은 다시 한번 고조됐다.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는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의 긴장 고조도 불사했다.

미국이 중국과 직접 충돌하는 위험을 피한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서해에서 동해로 옮겼다.

그러나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대중국 압박의 한 고리로 이용하고 아시아에서 중국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국무부 장관 클린턴과 국방부 장관 게이츠를 함께 파견해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을 열고 핵 항공모함뿐 아니라 최신에 스텔스 전투기 F-22를 참가시키는 최대 규모의 훈련을 벌여 한국을 확고한 동맹국으로 묶어 두고 대중국 압박의 한 축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대규모 미사일 발사와 전투기를 동원한 훈련으로 미국에 순순히 밀리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일련의 대중국 압박을 추진하고 있다.

2+2회담 직후 게이츠는 인도네시아 군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미국 합참의장 멀린은 인도 특수부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반(反)테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27일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또, 클린턴은 2+2회담 직후 베트남 ARF(아세안지역 안보포럼) 회의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에 국가적 이해가 걸려 있다"고 말해, 티베트·타이완과 함께 남중국해가 '핵심적 이해관계'라고 선언한 중국에게 남중국해를 순순히 넘겨줄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과 이해관계를 다투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후견인 구실을 자처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중국의 관영 언론은 "미국이 중국을 포

위하는 보름달형 방위선을 형성했다"며 이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 최대 규모 훈련

게다가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중국이 언급한 데 반해, 미국은 '조건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내놓기로 해 당분간 대북·대중국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북한은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북한을 더욱더 중국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고, 중국이 북한의 핵 실험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상황은 조금 복잡하다.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방안으로 금융 제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대북 금융 제재가 실제 실행되면 북한 계좌를 개설해 준 중국의 주요 은행들은 북한 자산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미국과 금융 관계 단절을 감수해야 한다.

2005년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자금 세탁 창구로 BDA(방코델타아시아)를 지목

하고 제재했을 때 중국 당국과 은행들은 이에 순순히 따랐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제재 요구에 굴복한다면 분명 중국의 위신은 추락할 것이다.

쏟아낸 말과 정책 들 때문에 미국·한국과 중국·북한의 갈등이 언제, 어떻게 봉합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갈등이 무한정 지속되고 전면전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매우 밀접해 이 관계가 깨지면 양측 모두 큰 피해를 볼 수 있고, 한국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높아가는 미중 간의 경제적·지정학적 갈등은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성을 갈수록 높이며 중장기적으로 끔찍한 비극을 부를 수 있다. 더구나 미제국주의에 빌붙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한국 지배자들의 시도가 이 위험천만한 갈등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2+2회담 때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 전투병 파병을 약속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한국이 최근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사정거리 1천5백 킬로미터 순항미사일도 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뿐 아니라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들 간 경쟁 체제에 반대하는 태도와 운동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강동훈

영포회 부패 추문

## 위기가 지배계급의 분열 촉진

이명박이 중단을 요구하면서 영포게이트를 둘러싼 '세나라당'의 균열은 잠시 멈추는 듯했다. 이 소동극의 마지막 장면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정두언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아요" 하며 절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봉합은 잠시였다. 이명박의 권력기관 통제력이 매우 취약해졌다는 것이 급세 드러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한나라당 의원 남경필 등을 뒷조사한 것이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이상득·박영준 쪽과 정두언 쪽의 권력 다툼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영포(영일 포항) 라인이 한 것들이 더 많이 밝혀지고 있다. 이들은 친노 인사나 한나라당 내 경쟁자들의 약점을 찾아내 압박하려고 광범한 사찰을 해 왔다. 반면 삼성 법인카드로 료살풍을 드나든 서울 국제청장 조흥희 등 자기 쪽 사람들의 비리는 수사를 중단시켜 버렸다.

또 영포 라인 인사들은 주요 은행과 대기업 들의 사외이사·감사·사장 자리에 포진해 연봉 수억 원을 받아 왔다. KB금융지주는 'MB금융지주'라고 불릴 정도다.

### 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청와대 이영호, 국무총리실 박영준으로 올라가는 이너 서클이 이 과정을 주도했고, 그 꼭대기에 이상득이 있다는 관측이 많다. 그래서 2008년 총선 전에 이상득 불출마를 요구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찰 대상이 돼 왔다는 것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말에 만들어졌다. 이명박이 퇴진 위기까지 내몰렸던 촛불항쟁이 사그라든 직후였다. 당시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이상득 쪽과 정두언 쪽의 아귀다툼은 2라운드로 넘어갔다.

사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던 이명박의 지시가 공직윤리지원관실 탄생의 배경이 됐을 것이다.

그 후 친노 인사와 진보단체 인사 등에 대한 광범한 사찰이 진행됐고 공직윤리지원관실뿐 아니라 국정원·경찰 등도 사찰 경쟁을 벌여 왔다.

국정원의 박원순 변호사 사찰 의혹, 기무사의 민주노동당 당직자 사찰 의혹,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진보교육감 후보 주변 동향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런 사찰과 압박이 초기에는 정권의 통제력 회복에 도움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기 레임덕이 시작되면서 이것은 이명박의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요즘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곳곳에서 지배자들의 분열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박사모는 은평에서 이재오 낙선 운동을 벌이고 있고, <중앙일보>는 이명박 사돈인 강용석의 저질 발언을 폭로했다.

검찰총장 김준규는 한나라당을 향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발끈했

고, 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견도 정부를 뼈대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과 재벌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은 재래시장에 가서 만두를 먹으며 "대기업이 현금보유량이 많은데 투자를 안 하니 서민들이 더 힘들다"는 발언을 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다시 '친서민' 가면을 꺼내 든 것이다. 그러자 <중앙일보>는 "지난 정권"처럼 "부자와 서민으로 편 가르기" 하려는 거냐며 반발했다.

불안정한 경기 회복과 경제적 양극화가 기층에서 불만과 분노를 일으키며 정치 위기를 촉진시키고 있고, 위기 대처 방법을 두고 지배자들의 분열은 더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조선일보> 주필 강천석은 "요즘 나라의 장래와 관련한 상서롭지 못한 예감에 몸을 뒤척이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지배자들의 불면의 밤은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전지윤

## 우파가 한상렬 목사를 또 다른 속죄양으로 삼으려 한다

방북 중인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가 지난 6월 22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우파의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들은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 생명들의 살인 원흉"이라는 한상렬 목사의 표현을 부각하며, 그를 황당한 음모론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우익 단체들은 7월 22일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한상렬 목사 주장의 핵심은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 이 과정에서 미국도 동북아에서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점,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 강경책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이명박에게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런 한상렬 목사의 지적은 올바르며,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들도 이런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가 정부 허락 없이 방북한 것도 잘못이 아니다. 정부의 승인이나 통제 없이 이 산가족들조차 만나지 못하게 남북 자유왕래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가 문제다.

그럼에도 보수 언론들은 "그가 돌아오는 대로 대한민국은 법이 서슬 퍼렇게 살아 있는 법치 국가임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한상렬 목사 마녀사냥은 정부와 우파들이 여전히 위기 탈출용 속죄양을 찾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조기 레임덕과 한나라당의 내홍 속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마녀사냥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점상 이번 마녀사냥은 친북 색깔



7월 3일 한국진보연대 탄압 반대 집회

론을 펴 재보선에서 보수 세력을 결집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한국진보연대 탄압이 두 명의 영장 기각으로 순탄치 않게 되자, 우파는 한상렬 목사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왔다.

대법원도 최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결해, 이런 마녀사냥에 힘을 보탰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말했다.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들 ... 에게 묻고 싶다. 한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씨의 발언에 동의하는가. 한 씨의 사고와 궤를 같이하는가. 이 물음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이것은 진보진영에 친북 색깔을 칠하는 동시에, 진보진영을 이간질하려는 술수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한상렬 목사 방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 정권·체제에 우호적인 그의 입장과 발언에 전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부 탄압에 반대해 그를 단호하게 방어해야 한다.

이재환



# 유출된 문건들이 보여 주는 아프가니스탄의 참상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야만성을 만천하에 드러낸(그리고 반전 운동의 주장이 옳았음을 보여 주는) 유출 문서 내용을 시안 루덕(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이 소개한다.

이번 주에 공개된 미군 문서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오랜 비극과 참상을 낱알이 드러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이 문건들은 2004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전쟁의 일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문건들은 영국 통치자들이 이라크 전쟁이 불법이었다고 결론 내린 듯한 시점에 폭로됐다.

두 사건 모두 소위 “대테러 전쟁”의 명분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문서에 묘사된 거짓말과 무차별적 살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은 더욱 위험한 곳이 됐다.

예컨대 지난주 금요일(7월 23일)에는 나토군의 로켓이 헬만드 주 상진에서 민간인 45명을 죽였다. 사상자 가운데는 여성과 어린이들도 있었다(옆 사진 참조).

처음에 나토 측은 “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해 줄 만한 작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꿨다.

유출된 문건들은 나토군 간의 오인 사격, 무인 비행기의 민간인 마을 폭격 등



상진에서 나토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45명이 죽었다. 사진은 나토 폭격으로 부상당한 조카를 위로하는 압둘 가파르.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검문소에서, 거리에서, 주택가에서, 그리고 점령에 맞선 시위 현장에서 군인들이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들도 면밀히 기록하고 있다.

미군 문건이기는 하지만 영국 병사들

과 지휘관들의 작전 내용도 일부 다루고 있다.

특히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에는 ‘외국인에게 공개 금지’를 뜻하는 NOFORN 코드가 찍혀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 코드가 찍힌 문건 하나는 태스크포스 373이라는 미군 부대의 공격 작전을 묘사하고 있다. 이 부대의 임무는 미군 첩보상의 목표물들을 “사살 또는 생포”하는 것이다.

2007년 6월 17일에 태스크포스 373은 리비아 출신 탈레반 전사 아부 라이트 알-리비를 잡기 위해 팍티카 주의 어느 마을을 습격했다.

이들은 이 작전에 신형 무기를 동원했다. 고기동포병로켓발사시스템(HIMARS)라고 알려진, 소형 트럭에 탑재된 여섯 발의 다연장로켓이 바로 그것이다.

이 로켓 공격으로 비전투원 일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희생자들은 모두 어린이들이었다.

## 아편

보고서는 태스크포스 373 부대원들이 어떤 공격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누락했다.

이 문건에는 다음의 설명과 함께 NOFORN 코드가 찍혀 있다: “태스크포스 373이 HIMARS 공격을 수행했다는 정보가 누출되서는 안 된다.”

문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살인이 만연하다는 것도 보여 준다. 오토바이를 탄 십대 소년들이 검문소에서 사살당하기도 한다.

병사들이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멈춰 서지 않은 버스에 대고 발포해서 민간인 네 명이 죽은 일도 있었다.

2007년 6월에는 미군 병사들이 캄캄한 밤에 횃불을 향해 총을 쏘아 아프가니스탄 경찰관 일곱 명을 죽이고 네 명을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다.

유출 문건들은 또한 아프가니스탄 보안군 내부에서 경찰, 군대, 그리고 국경 수비대 간에 알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 준다.

한 문건에 묘사된 사건에서는 아프가니스탄 병사들이 “아편을 한 상태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는 중에 병사들 사이에서 싸움이 터지고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영국 병사 한 명도 총을 쏘고, 이에 국경 수비대원 한 명이 사망했다.

문건들에 따르면 국경 수비대원들은 검문소를 지나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하며 경찰은 뇌물을 받는다고 한다.

이 모든 사실을 감안하면, 자신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령군의 주장은 흉측한 거짓말이다.

이제 지배자들은 이라크 전쟁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똑같은 재앙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병력을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 민중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다.

번역 천경록

## 이라크

## 긴장 증폭을 보여 주는 폭탄 테러

시안 루덕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7월 18일 바그다드 인근 라드와니아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43명이 숨졌다. 이들은 월급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가 목숨을 잃었다. 불안정성이 여전히 이라크를 휘감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사망자들은 수니파 무슬림 민병대원들이었다. 미국의 후원을 받는 이라크 정부는 2009년부터 이들에게 자금을 대기 시작했다.

애초 이 민병대들은 점령에 반대하는 저항의 일부였다. 지금은 ‘계몽위원회’라고 불린다.

이 민병대원들의 봉급은 3백 달러가량이다. 정부가 이들의 무장과 훈련을 지원한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라크가 점령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완벽한 사례라는 생각을 펴뜨린다.

수십 만에 이르는 무고한 사망자들은 있어라. 그 나라는 이제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등불이다.

그러나 두 나라 정부는 이런 주장을 계속 유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무엇보다 감출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점령에서 비롯한 종파적 긴장이 커져 이라크를 갈가리 찢고 있다.

## 비호

민병대는 국가의 비호와 공동체 내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통해 세를 늘려 왔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 수니파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시아파만이 아니라 종종 수니파 저항 세력의 공격을 받는 것은 그래서다.

한 계몽위원회 회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증오한다. 그리고 정부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 어려운 상황이다.”

대다수 계몽위원회들이 지역 자원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지역 민병대 출신이다.

10만 명가량이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의 임무는 하찮다.

이라크 정부는 민병대와 이들의 힘을 경계한다.

민병대와 국가의 협력은 미국의 지속적인 압력과 자금 지원을 통해서만 유지된다.

바그다드를 지그재그로 관통하는 분리 장벽은 미국의 점령이 이라크에 강요하는 분열을 거듭 상기시킨다.

## 두려움

미국도 긴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군이 이란의 후원을 받는 시아파 민병대의 공격을 두려워해 보안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 7만 5천 명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지금도 거리 순찰을 한다.

이 나라의 정치 위기는 상층부의 위기와 연결돼 있다. 선거가 끝난 지 넉 달이 됐는데도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를 큰 성공 사례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리 되면 아프가니스탄의 성공을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민병대 매수는 돈을 살포할 때만 통할 것이다.

이것은 점령 치하에서 부글부글 끓는 이라크인들의 불만이 터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번역 김인식

## 프랑스 하원, 베일 착용 금지법 통과

## 이슬람 혐오증을 부추길 것이다

최근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 착용 금지법은 여성해방과 아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무슬림 공격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짐 올프리스가 말한다. 짐 올프리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이고,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프랑스 정치사를 가르치고 있다.

7월 13일 프랑스 하원이 부르카[눈을 제외한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옷]나 니캅[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 착용을 불법화했다. 단 한 명의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사회당과 녹색당은 기권했다.

이 법이 즉각적 효력을 미치는 대상은 2천 명이 안 된다. 프랑스 거주 무슬림 여성 중 0.1퍼센트만이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법적 문제 때문에 이 조처가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프랑스 하원의 표결은 스위스의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국민투표, 벨기에와 스페인·북부 이탈리아 일부 지역들의 베일 착용 금지 결정에 뒤이은 것이다. 이 조처들의 목적은 소수 무슬림들을 속죄양 삼아 이슬람 근본주의의 “위협성”을 과장하는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베일 착용에 반대하는 히스테리가 폭증했고, 주요 정치인들은 베일을 미키 마우스 가면, 입마개, “걸어다니는 관”에 비유했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얼굴과 신체 전부를 가리는 베일이 “여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공격이 이슬람 혐오증을 정당화했다.

올 초 프랑스 서부의 한 가게에서 한 여성의 베일이 강제로 벗겨진 일이 있었다. 올 봄 지방선거에서는 장-마리



부르카 금지법 반대 시위

르펜이 이끄는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의 지지가 급증했다.

## 관심을 돌리기

그러나 이 조처는 사르코지 정부의 취약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전임 좌우파 정부의 절충과는 “단절”하겠다고 공약해 당선했다.

그의 임무는 신자유주의 의제를 단호하게 확립하고 저항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르코지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저항을 평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을 뿐 아니라 심각한 부패 추문에 휘말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 혐오증의 입법화는 정부의 무능을 가리고 정부의 약점에 쏠려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구실을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좌파는 왜 정부의 인종차별주의를 폭로하지 않는가?

어디서 프랑스의 무슬림 공동체를 방어하는 시위들이 있었는가?

지난 15년 동안 사회 운동들이 단연 강력했던 나라에서 좌파는 왜 이슬람 혐오증과 제대로 투쟁하지 못했는가?

그 답의 일부는 프랑스 좌파 내 존재

하는 세속주의 공화국 전통의 영향력과 관계있다.

19세기 후반에 이것은 반교권주의(反敎權主義) 형태를 띠었고, 군주제를 지지하는 가톨릭 교회에 맞서는 강력한 수단이었다.

사회주의자 폴 라파르그가 주장했듯이, 이것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본가가 아니라 성직자를 파괴하게끔” 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전통에 공화국 민족주의가 뿌리 내릴 여지가 생겨났다.

1980년대에 사회당은 야심 찬 사회개혁 정책들을 포기하면서 그 대응품으로 공화국 민족주의를 내세웠다. 르펜의 부상에 맞설 대안으로 “공화국의 가치”를 들먹였다.

그래서 1980년대 말 무슬림이 하잡 착용 문제로 공격당할 때 좌파는 무기력했다. 마침내 2004년에는 하잡이 학교에서 금지됐다.

## 신화들

공화국 세속주의는 한때 가톨릭 교회의 부와 특권에 반대하는 무기였지만, 지금은 억압받는 프랑스의 무슬림 소수자를 희생양 삼는 도구가 됐다.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의 착용 금지는 다양한 신화들에 근거해 있다. 무슬림 극단주의가 이슬람 혐오증보다 더 큰 문제다. 국가가 여성에게 무엇을 입을 수 있는지 알려 줄 때 여성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 등.

이런 신화들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하려면 이슬람이 아니라 이슬람 혐오증을 적으로 규정하는 결연하고 분명한 운동이 필요하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인식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당권 1년 정치

# 규율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논쟁 필요

진보신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심상정 전 대표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을 부과했다.

심 전 대표가 6·2 지방선거에서 유시민을 지지하며 경기도지사 후보에서 사퇴한 행동에 비판적인 일부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유시민 지지를 위한 심 전 대표의 중도 사퇴는 정치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잘못이다. 서울시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한명숙 선거운동을 한 민주노동당 이상규 후보가 정치적으로 비판받아야 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정치적 오류를 단호하게 비판하는 것과 행정적 징계 조치로 입막음하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정치적 이견을 행정적으로 입막음하려는 분위기가말로 오히려 불신과 분열을 낳기 십상이다. 이견자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배제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피할 수 있는 논쟁도 아니다. 심 전 대표의 후보 사퇴가 촉발한 “연합 정치” 논쟁은 반MB 정서를 어떻게 진보 쪽으로 끌어올 것이냐 하는 과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진보신



진보신당 당발전특별위원회 회의 중 심상정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배경에는 '일자리, 초록 복지 확대!'와 '그래! 진보'라는 문구가 보인다.

당이 맞닥뜨린 어려움은 진보세력이 분열해 세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반MB 정서를 대변할 대안세력으로 비치지 못한 데 있었다. 그 때문에 거대한 반MB 정서가 진보 양당에게는 사퇴와 양보의 압력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심 전 대표의 중도 사퇴는 진보신당이 반MB 민주연합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한 상황과도 관계있다.

실제 진보신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독자 완주했지만, 막상 지역의 기초의원 당선자 상당수가 민주당을 포함하는 이런저런 연합으로 선거에 임하기도 했다.

그런 모순된 상황에서 심 전 대표를 징계한 것은 반MB 민주연합 정책에 대한 단죄라기보다는 타당 후보를 위해 사퇴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조치인 듯하다.

경기도당 당기위도 심 전 대표의

“정치행위가 엄밀하게 당론을 ‘위배했는가’의 여부 문제는 당의 최고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 등에서 …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당내 좌파라면 징계 요구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진보진영의 단결과 재편 방안을 내놓고 실천에서 입증받는 방식으로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

김문성

## 부패한 권력자들 아니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8·15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사면 대상자는 대우그룹 전 회장 김우중, 친박연대 전 대표 서청원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등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들이다.

이명박 정권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서 “화해”라는 낯 뜨거운 명분을 들이댄다.

이것이 IMF 환란주변 중 한 명이 자 선고받은 추징금조차 내지 않으려고 재산 1천억 원을 빼돌린 김우중에게 면죄부를 주는 명분이다.

### 면죄부

서청원을 풀어 주는 건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 합당의 전제조건일 것이다.

결국 이번 사면도 가진 자들끼리 흠탕물 속에서 밀고 당겨 주는 정치



노건평(왼쪽), 김우중(가운데), 서청원(오른쪽) 이번에도 부패와 권력의 화신들만 석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적 흥정의 결과물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미 임기 초에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등 부패한 재벌총수와 보수언론 사주 74명을 한꺼번에 사면해 줬다.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갑작스런 명분을 내세워 부패의 화신인 이견회를 단독사면해 주는 파격도 감행했다.

계속되는 권력형 부패 범죄자들에 대한 송방망이 처벌과 면죄부 사면은 ‘법질서’ 자체에 환멸을 부

추진다.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리를 지켜 주어요.” 감옥에서 귀가 닳도록 틀어 주는 로고송을 들을 때마다 양심수들은 울컥울컥 화가 치민다고 한다.

법은 인권을 지켜 주기는커녕 마지막 남은 생활터전까지도 앗아가 버리는 괴물로 인식돼 가고 있다.

촛불항쟁, 용산참사, 쌍용차 점거 파업 등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지키

기 위해 저항하다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구속노동자와 양심수들이 이 사실을 입증해 준다. 현재 감옥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까지 포함해 9백여 명의 양심수가 있다.

이명박 정권은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아래로부터 저항이 발생할 때마다 법의 이름으로 철혈을 내리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용산 철거민들을 불태워 죽이고,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며 협상을 요구하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업주들과 정부의 폭력 만행은 요즘 언론에 회자되는 흉악범죄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권력층 부패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명박 정권의 특별사면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구속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 임금·복지는 깎으면서 군비는 늘리는 정신 나간 체제

얼마 전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발표한 전 세계 무기 거래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재래식 무기 국제 거래는 22퍼센트나 늘었다.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던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5.9퍼센트나 늘었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많은 산업이 위축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전력증강 노력은 수그러들지 않고 군수산업은 여전히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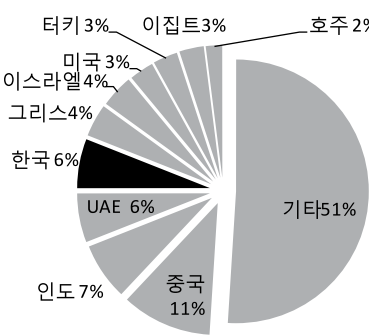
각국 정부는 투기 행각으로 죽음 직전에 이른 금융 산업을 구하려고 막대한 공적자금을 퍼부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재정 적자에서

탈출하려고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적자금은 평범한 대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적자를 메우려는 긴축 정책도 결국엔 평범한 대중의 호주머니를 국가가 또 한번 강탈해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이 전 세계 노동자와 빈민들에게 끼칠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무기 산업에 쏟아붓는 엄청난 돈이면 이런 고통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배자들은 군수 산업에 들이붓는 돈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다. 한국의 지난해 군비지출 규모는 2백41억 달러로 세계 12위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이 전 세계 무기 거래에서 차지한 규모는 놀랄 정



주요 재래식 무기 수요 현황, 2004~2008년 출처: SIPRI

도가. 무기 수입국으로는 세계 3위이며(중국 9퍼센트, 인도 7퍼센트, 한국 6퍼센트),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로는 이스라엘(11퍼센트)을 제치고 1위(14퍼센트)를 기록했다.

심각한 재정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리스는 전 세계 무기 수입액의 4퍼센트를 차지하며 한국의 뒤를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재정 적자를 모면하려고 연금과 임금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하면서, 군비 지출은 증가시키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가 노동자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그리스 노동자들처럼 강력한 투쟁으로 국가의 가혹한 정책을 저지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런 끔찍한 체제를 바꿔야 할 것이다.

심호철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왜 국제주의 사상이 필요한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국제화된 자본주의 사회다. 우리는 세계적 흐름과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사회나 삶을 상상하기 힘들다.

이 세계화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많은 노동계급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들의 처지와 조건은 점점 더 닮아 가고 있다. ‘죽음의 공장’ 삼성반도체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중국 폭스콘 공장 노동자들의 끔찍한 처지는 너무나 닮아 있다.

또 전 세계 노동자들은 지금 임금·연금 삭감과 복지 축소, 정리해고라는 지배자들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각국 정부들은 하나같이 노동자 투쟁이 경제를 더욱 위기로 빠뜨려 국익에 해롭다고 비난하며 탄압한다.

또 피난처와 일자리를 찾아온 이주민들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골칫거리’라고 비난한다. 그리고 이들을 경제 위기로 분노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내던진다.

### 고안된

세계 곳곳에서 부상하는 인종차별주의와 파시즘은 정부들의 이주민 속죄양 삼기 정책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일자리 도둑, 잠재적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몰아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이런 분열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진정한 주범인 자본과 국가에 맞선 저항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전 세계 지배자들은 이런 분열 지배를 통해 노동자·민중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우려면 노동자 국제주의가 필요하다. 국제주의는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체제는 국제적 체제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국민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국의 이익이나 자기 민족의 이익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은 신화일 뿐이다.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이 사회가 착취하고 억압하는 지배계급과 착취받고 억압받는 피지배계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 고안된 역사적 산물이다.

자본주의 이전에 국민국가와 이에 기반한 민족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제주의는 착취받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이론이고 궁극으로 노동자 계급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전략이다.

특히 노동계급이 인종과 민족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제 노동자 운동은 이런 시험대에 수차례 올랐다. 때로 쓰디쓴 패배를 겪기도 했지만 때로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흑인 차별이 절정에 이른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노동기사단’, ‘미국노동연합’, ‘세계산업노동자연맹’ 같은 노동자 대중조직들이 인종차별을 넘어 흑인과 백인 노동자들을 단결시켰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발전해 일국 차원에서 자본가 국가를 무너뜨리고 노동자들이 권력을 획득했다 해도 다음 문제가 남는다.

즉 세계 체제인 자본주의에서 새로 탄생한 노동자 국가가 홀로 살아남기는 불가능하다. 세계의 다른 경제들과 교류 없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발상은 완전한 공상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국에서 성공한 노동자 혁명이 반드시 국제적으로 확산돼야 한다. 1917년 러시아의 성공한 노동자 혁명은 독일 등에서 국제 혁명의 패배 이후 스탈린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일국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결국 반혁명의 길로 나아가며 변질돼 버렸다.

전쟁, 경제 위기, 기후변화, 인종차별주의와 파시즘의 부흥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은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인 노동자 국제주의라는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한다.

우리는 국제주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자, 탈북자, 난민 등 모든 이주민들을 환영해야 하고 기업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벌이는 온갖 만행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이정원



## 유럽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말하는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와 그리스 반자본주의 활동가 니코스 루도스가 다함께가 주최한 맑시즘2010에서 연설하기 위해 방한했다. 두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레프트2〉 김용욱 기자에게 경제 위기와 노동자 투쟁의 전망을 말한다.

### 조셉 추나라



조셉 추나라

“올해 위기가 끝났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와 유럽의 재정 위기를 포함해, 불안정 요소들을 보면서 더불됨을 경고하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단기적 요인뿐 아니라 위기를 장기화시키는 요인들을 봐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2차 세계대 이후에 있었던 이윤율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윤율을 일부 회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는 주로 노동자들을 쥐어짠 덕분이었습니다. 이윤율은 1950~60년대 호황기 수준을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윤율을 회복하려면 마르크스가 ‘죽은 노동’이라 부른 기계나 원료 등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파괴돼야 합니다. 1930년대와 제2차세계대전 당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1970년대 위기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나서 부도 위기 기업을 구제했습니다.

당시 국가들은 한 기업이 도산하면서 연쇄 도산을 낳아 세계 체제 자체가 큰 위기에 빠질까 두려워 그랬던 것입니다. 덕분에 세계경제 이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세계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영구적인 정체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 경제는 한동안 상당히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와 60년대 체제적 위기 회호와 안정을 가능케 했던 조건(높은 이윤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낮은 이윤율

오늘날 위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낮은 상황에서 발생한 변화들을 봐야 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금융의 급격한 성장입니다. 자본가들은 이윤(장부상 이윤)을 단기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고 금융 투기와 신용 시장 등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경제 곳곳에서 거품이 형성됐습니다. 특히, 어어미러한 신용 거품이 형성됐습니다. 이것은 한동안 노동자들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한몫했습니다.

자본가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 노동자들이 더 많이 소비하기를 바라지만 임금도 최대한 적게 주려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은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개인 부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변화로 세계경제는 대단히 불안정해졌습니다. 마르크스는 금융이 자본주의가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더 팽창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투기와 위기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경제 성장과 역동성에 도움이 되지만, 경제 위기가 일단 시작되면 동시에 위기를 확산시키고 온갖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2007년 경제 위기가 시작했을 때, 그 위기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의 위기로 표현된 것은 놀랍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기존 모기지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기존 모기지를 빌리고 값을 형편이 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 줄 방법이 된 것이 바로 서브프라임모기지였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로 돈을 빌려 준 은행들은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가치가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못 갚아도 그 집을 차압해 팔면 여전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부동산 가격이 정체하고 떨어지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에서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가 위기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시장에 한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먼저, 금융시스템이 서브프라임모기지를 파생상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은행들도 서브프라임모기



시진핑 회담

경제 위기의 해법에 합의하지 못한 G20 지도자들 제2의 대공황을 막기 위한 대규모 개입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하자 세계 지배자들은 긴축과 경기부양 중 어느 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지 시장의 위기에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 최근 금융 부문이 발달한 것은 실물 경제의 건강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 거품이 꺼지자 숨어 있던 온갖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금융 위기가 금융에 한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금융 위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융 거품 붕괴는 그동안 체제를 움직여온 원동력 중 하나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사라지자 다른 문제들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 국가 개입

경제 위기는 단계를 거치며 발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위기의 단계는 몇 가지 불안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불황이 대공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취한 조치들과 밀접히 연관돼 있습니다.

먼저, 산업 생산 추이를 표시한 그래프를 보면, 위기가 발생한 뒤부터 몇 달 동안 산업생산 동향은 1930년대 대공황과 대단히 비슷했습니다. 특히,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뒤부터 차이가 생겼습니다. 산업생산 하락이 멈추고 약간 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가 개입입니다. 국가가 많은 곳에서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됐습니다. 구제금융 투입, 국유화, 경기부양책 등이 전시를 제외하고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진행됐습니다. 1930년대 초 뉴딜을 제외하면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수준이었습니다. 국가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 G20으로 표현되는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기술적 의미의 불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전천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미약한 성장이었습니

경제 위기의 현 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는 금융시스템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은행 부채 문제가 다른 유럽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불안정 때문에 국가들은 지금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 지출과 경기 부양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돈을 계속 빌릴 것인가, 아니면 부채 수준을 관리하고 되갚기 시작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큰 문제가 발생한 거란 점입니다.

만약 국가가 계속 지출 수준을 유지하면 시장은 투기 활동을 벌이며 공격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출을 줄이면

그동안 경제를 움직였던 연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간 부문이 정부의 수요를 대신할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제 위기는 불균등하지만 서로 결합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에서도 위기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2008년 독일은 세계 1위 수출국이었고 영국은 순수입국이었습니다. 한쪽은 저축 수준이 높았고 다른 쪽은 부채 수준이 높았습니다.

또, 경제 위기 대응은 나라별로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정부들은 주로 자금 자본을 도왔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돼 상황은 대단히 불균등하고 나라마다 위기의 발전 속도가 다릅니다. 예컨대, 영국의 위기 정도는 아직 그리스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몇 년 뒤 영국이 그리스처럼 될지도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불균등성과 함께 결합된 측면을 봐야 합니다.

예컨대, 만약 유럽 경제의 불황이 심각해지면, 그것은 수출의존적인 독일 자본주의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유럽의 은행들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나라 은행이 도산하면 연쇄 도산을 부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유로화로도 서로 연결돼 있고,

물론, 어떤 이는 중국 같은 나라의 고도성장이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더 많이 소비하고 다른 나라가 수출을 늘릴 수 있다면 양 정책 지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것은 앞서 봤던 구조적 문제때문에 지배자들이 함께 위기에서 탈출할 표출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과 혼란은 기층 투쟁을 좀더 고무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기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반자본주의 좌파가 기층 투쟁 조직에서 결정적 구실 하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 위기는 전 세계적 위기의 일부입니다. 그리스의 문제가 무분별한 복지 지출,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금’ 등이 낳은 문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복지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임금도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다른 유로존 국가와 비슷합니다. 연금도 형편없어서, 농민들은 은퇴 후 연금으로 월 4백 유로(약 60만 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스가 문제가 된 것은 경제 위기로 최근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 약 6백억 유로가 은행과 기업 지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부채를 급격히 늘린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국제 시장이 그리스 국채에 부과하는 이자율을 크게 높인 것입니다. 그리스 경제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세계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것에 국제 자본가와 투기꾼들이 대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국채 이자율이 크게 났던 것은 2009년 두바이 사태 이후였던 것이 이 점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위기가 그리스의 독특한 성격이나 남비, 비효율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원인을 감추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 악순환

그리스 정부는 노동자들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실’을 수용하고 투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IMF의 정책이말로 경제를 살리는 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통계를 봐도, 현 긴축 정책이 계속 추진되면 2012년 그리스 국채는 국내총생산의 1백50퍼센트로 이를 갚아야 합니다. 이들은 그저 2012년이 되면 세계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을까 기대할 뿐입니다.

긴축의 효과로 수요가 줄면서 경제가 더 나빠지고, 빚이 줄기는커녕 더 늘자 IMF가 더 많은 개입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IMF는 약한 규제금융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각종 조건을 달아 주는데, 최근 IMF는 올 10월에 규제금융을 받으려면 전력 부문을 민영화하라고 그리스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보통 언론들은 5월 5일 파업·시위와 비교해 최근 투쟁의 규모가 줄었고 노동자 투쟁이 사그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7월 중순 연금 개입법이 통과된 것은 그런 인상을 강화했죠.

그러나 그리스 노동자들은 그 뒤에도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총파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7월 중순 양대 노총 총파업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저항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5일 총파업과 비교해 운동이 약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월 5일 총파업은 그리스 역사상 최대 파업이었고 노동자들은 워낙 분노가 커 국회 의사당 점거를 시도했습니다. 만약 그런 파업이 한 번 더 일어났다면 이 정부는 쫓겨났을 것입니다.

한편, 다양한 부문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 노조와 의사 노조가 닷새 파업을 벌였습니다. 공항 관제사들은 벌임이 파업을 금지하자 출근 후 일을 거부하는 파업을 벌였습니다. 공항 당국은 모든 관제사들의 여름 휴가를 없애는 것으로 보복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의 압력 때문에 이 조치를 철회해야 했습니다.

또, 지금 그리스의 모든 항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항만 운영자들이 항만 민영화 정책 반대파에 불임해 항구를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트럭 소유주들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투쟁은 중단되기는커녕 부분별로 더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지 않아야 할 것은 정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IMF는 신규 자금 지원 조건으로 더 많은 긴축 정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집단 투쟁이 있을 것입니다. 가을에는 민영화 대상이 된 전력 노동자 투쟁이나 교육 재정 삭감 등 교육 조건 악화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학교 점

거 투쟁 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 사회당(PASOK)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 좌파가 정부 정책에 반대합니다. 지난 임금 달 동안 벌어진 임금 차레 총파업은 모두 노조와 좌파들이 조직했습니다.

사실, 공공과 민간 양대 노조 총연맹 지도부는 대다수가 친사회당입니다. 그들은 지난해 말 사회당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긴축 정책을 발표했을 때 항의 총파업을 하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층 압력에 밀려 파업을 선언해야 했습니다.

의회에서 영향력 있는 좌파 야당은 그리스 공산당과 쉬리자입니다. 그들은 투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 저항을 조직하는 데 곱했지만 말이지.

### 기층 압력

그리스 좌파들이 공격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만 기층 투쟁으로 긴축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 공격이 닥쳤을 때 사회당이 집권당이기에 저항 운동이 약하고 쉽게 패배할 거라 비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첫 총파업을 가능하게 한 추동력은 의회가 아니라 기층 노동자들의 움직임에서 나왔습니다. 반자본주의 좌파는 기층이 투쟁을 조직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첫 총파업 조직에서 반자본주의 좌파가 결정적 구실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압력이 돼 공산당은 자신의 영향력이 큰 노조의 파업을 조직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지금껏 총파업 투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자본주의 좌파는 긴축 반대 투쟁을 시작하고 전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했습니다. 첫째, 공격 받는 부문의 노동자들은 분노가 컸지만 주류 정치권이 이런 분노를 무시하자 곱감감을 느꼈습니다. 또, ‘긴축에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다’라는 등 온갖 선전 공세에 노출됐습니다. 작업장에서 활동하는 반자본주의 좌파들은 노동자들이 곱감을 극복하고 운동을 시작해 지속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반자본주의 좌파는 모든 주요 작업장에 포진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사 노조나 병원 노조, 지역 공무원 노조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당한 조직적 힘을 가진 노동자 집단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의 투쟁을 연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또, 반자본주의 좌파의 노력 덕분에 총파업과 시위에서 재무부 노동자, 교사 노동자 등 노조로 잘 조직된 노동자들과 노조 조직물이 낮은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파견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반자본주의 좌파는 운동을 정치화하고 이 운동에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예컨대, 이주인민 문제를 보죠. 정부는 인종차별주의를 이용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이 투쟁이 아니라 영통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주인민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자본주의 좌파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조직했고 이것을 노동자 투쟁과 연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총파업과 시위 현장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반자본주의 좌파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채 상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훨씬 포괄적인 반자본주의적 대안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또한 은행 국유화와 함께 국유화된 은행의 노동자 통제를 요구했습니다.

국유화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유화된 은행의 돈이 은행가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고 금지도 요구합니다. 그리스 정부 자신이 다음 달 실업률이 20퍼센트로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일부 노조들이 이런 반자본주의 좌파의 대안을 공식 요구로 채택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 정부가 이런 요구들을 수용할 거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들은 노조들이 공동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행동강령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공장이 파산해 문을 닫게 되면 우리는 그 공장 노동자들이 해고에 반대하면서 작업장을 점거하고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특하면 반자본주의 좌파의 대안은 비현실적이고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상관 없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주입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반자본주의 좌파의 대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아니라 구체적인 노동자 투쟁 경험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최근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 전부터 직장 폐쇄와 해고에 대응해 노동자들이 공장가와 은행을 점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해고 금지도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주류 언론의 여론조사를 봐도, 과반이 은행 국유화와 부채 상환 중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야말로 논쟁에서 져고 대다수 노동자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 정책들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파제는 어떻게 노동자 다수가 원하는 대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번역 김용욱



니코스 루도스

맑시즘2010

## 새로운 사상을 경청하는 젊은 청중들로 넘쳐나다



청중들

“맑시즘 2010 —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고려대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올해 열 돌을 맞은 맑시즘2010에는 1천2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대학생·청년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참가한 대학생이 4백20명에 이르렀고, 청소년도 수십 명이 참가했다. 다양한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참가했는데 특히 이맹박 정부 들어 집중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이 많이 참가했다. 부산, 강원, 전남 등 먼 곳에서도 참가자도 많았다.

올해 맑시즘에서는 뜨거운 현안부터 마르크스주의의 일반 정경까지 진지하고 열띤 토론들이 벌어졌다. 강의실 자리가 부족해 간이 의자를 놓고도 바닥에 앉아서 들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연사들의 주장을 경청했고 민주적이고 활발한 청중토론도 나흘 동안 계속됐다.

지금의 위기가 세계적인 만큼, 맑시즘2010에서는 국제적인 경제와 운동을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 그리스 반자본주의의 활동가 니코스 루도스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는 그리스와 유럽의 저항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참가자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참가자들은 올레만 총파업을 7번이나 벌인 그리스 노동자 투쟁에 특히 큰 관심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의 경험을 배워 한국에 확산하고 싶어 했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도 중요한 화두였다. 케인스주의, 스웨덴 모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등 여러 토론에 개역이나 혁명이나 하는 질문이 여전히 중요한 논점이었다.

### 자본주의의 대안

마르크스주의의 기초 시리즈 강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급진적 대안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민주주의, 교육, 빈곤, 환경, 여성 등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맑시즘은 연대의 공간이기도 했다. 행사장 곳곳에서 이주노조 농성 기금 마련을 위한 티셔츠 판매·모금, 삼성 반도체 파해 노동자를 위한 서명과 치료비 마련 모금, 국수노동자 후원을 위한 서명·모금, 동성애자인권연대 사진전과 후원 물품 판매 등이 진행됐다. 이주노조 지지 서명 활동에는 한국 건설노동자들도 함께 참가했다.

또 〈레프트2〉를 거리에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이맹박을 위한 모금도 진행됐다.

맑시즘은 2백16개에 이르는 노동조합, 학생회, 시민·사회 단체 후원을 바탕으로 열릴 수 있었다.

현재 경제 위기의 정도가 매우 크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위기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그리스와 같은 저항이 여러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조셉 추나라는 이때 대일수록 반자본주의의 조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때는 불균등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쟁을 더 앞으로 밀고 나가고자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온건한 지도부의 입장을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쟁을 더 앞으로 밀고 나가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그들이 주변 노동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자본주의의 좌파가 대안을 제시하려 하지 않으면 파시스트 등 다른 세력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혁명이란 것은 거대하고 집단적인 자기해방 과정입니다. 혁명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 함께 가입하는 것입니다.”

맑시즘은 참가한 사람들이 정치적 자금을 받고,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였다. 이 활동이 이제 각자의 삶에서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작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성영



# G20 정상들이 기후변화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긴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러시아는 최악의 가뭄을 맞아 23개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비축식량 3백만 톤을 긴급 방출했다. 중국 남부 지역에는 폭우가 그치지 않고 있고 유럽에서도 폭염으로 많은 노인들이 숨졌다. 미국 동부 지역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구 반대편 라틴아메리카는 한파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11월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책도 논의될 것이다.

12월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유엔기후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그 결과가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지 못하면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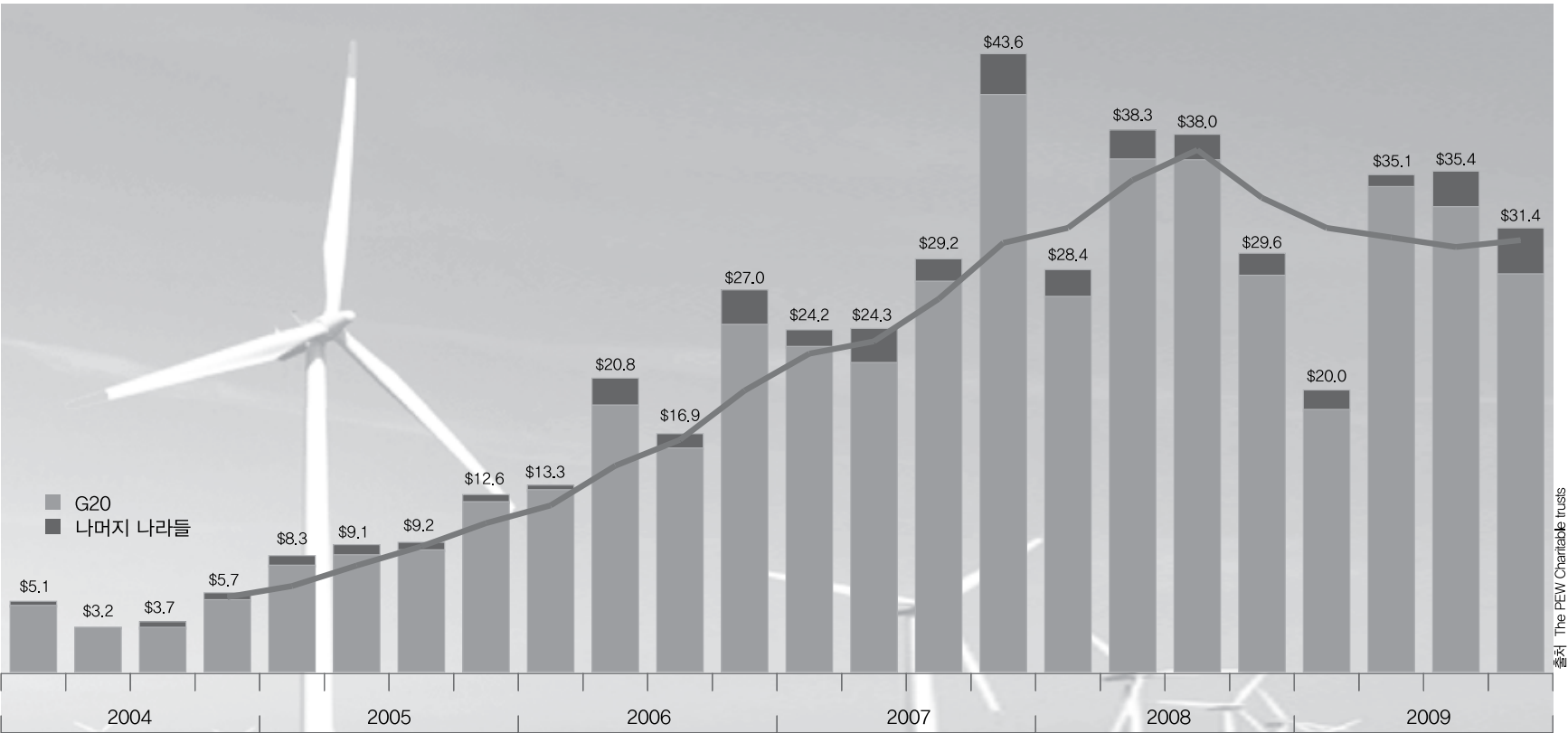
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호들갑스러운 선전과 달리 G20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적이 없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는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강제 규정이 없었다. 그저 “에너지 및 재무장관들이 각국별 국내 상황에 기초하여 이행 전략과 시간표를 발전시키”라고 했을 뿐이다.

산업계의 이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각국 재무장관들이 기후변화 재원 마련에 나서라고 해 사실상 기후변화 대책을 기업 이윤에 종속시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또,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약속했지만 누가 언제까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정에너지 기술 이전도 “자발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다른 나라



청정에너지 투자 추이 경제 위기 직후 은행을 살리려고 수십조 달러를 쏟아부은 데 비해,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는 오히려 줄었다.

(단위: 10억 달러)

경쟁 기업들에 넘겨줄 리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문구일 뿐이다.

따라서 G20 국가들의 ‘자발적’ 감축 계획은 절망적인 수준이다.

## G20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2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7퍼센트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준연도인 1990년 기준으로 보면 고작 4퍼센트 줄이는 것이다. 그조차 교토협약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거대 석유기업들과 자동차 기업들의 이윤에 큰 타격을 줄 감축 목표에 찬성하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BP아메리카, 코노코필립스, 캐터필러 등은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기후정상회담 직후 오바마의 기후변화 정책조차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을 제치고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 중국은 명확한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50퍼센트 감축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GDP가 증가할 것이므로 사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어날 것임을 뜻한다.

물론 1인당 배출량을 비교하면 중국은 미국의 4분의 1에 그친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지 않는다면 국제 협약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두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42퍼센트다.

러시아·인도·이탈리아·사우디아라비아·아르헨티나는 감축 목표조차 없고 터키는 교토 협약에 가입한 적도 없다.

다른 선진국들은 목표치를 내놨지만 기후변화를 멈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0퍼센트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1년 전에는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했다가 2월 발표에서는 2005년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배출전망치를 일부러 높게 잡았다.

기준 자체를 제멋대로 바꿔 버리니 줄이지 않고도 줄었다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산업 공정 관련 기업의 온실가스 규제는 지식경제부가, 건물·교통 분야는 국토해양부가, 폐기물 분야는 환경부가, 농수산업 관련 분야는 농수산식품부가 각각 맡도록 했다. “기업들이 여러 부처에서 시달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G20은 기후변화를 멈추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 시키려 한 것처럼 이들은 기후변화 책임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인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모든 이들이 G20 회의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장호중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저항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 절박한 구호를 내걸고,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은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삼성 반도체·LCD 공장들과 수원·청주·천안·서울 지역에서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공동행동’을 벌였다.

그러나 삼성은 첫날 기흥공장 앞 집회부터 출퇴근용 대형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공장 앞을 완전히 에워쌌다. 보안요원 수십 명이 앞을 가로막고 홍보물을 빼앗아 갔다.

희귀암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탕정공장 앞에 도착하자 회사 측은 댄스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기자회견조차 치를 수 없도록 방해했다. 피해 가족들은 ‘언제는 가족이라더니 병 걸려 죽으니까 쓰레기 취급하느냐’며 대성통곡했다.

### 발뺌

2007년 3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어린 노동자 황유미 씨가 백혈병에 걸려 숨지고, 그녀와 함께 2인 1조로 일했던 이숙영 씨도 똑같은 백혈병에 걸려 숨진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이를 폭로한 반올림에 피해 노동자들의 제보가 들어 왔다.



7월 20일 삼성전자 탕정공장 앞에서 오열하는 고(故) 연제욱 씨 유족

2010년 3월 또다시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박지연 씨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더 많은 제보가 들어 왔다. 반도체, LCD 등 삼성의 전기·전자 공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노동자는 제보된 숫자만 6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0명에 이른다.

최근 삼성에 투자한 8개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삼성 측에 ‘피해자 치료비 지원 대책’과 ‘진상규명’ 요구에 나서자, 삼성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삼성은 건강연구소를 차리고 하버드대 교수와 국내의 산업의학전문의들을 위촉해 1년간

재조사를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산재 피해노동자 가족이나 반올림은 삼성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수단으로 전문가의 입을 빌리려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삼성은 있는 발암물질조차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사에서 “삼성이 백혈병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 벤젠을 함유한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삼성은 이러한 사실을 완전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둘째, 삼성은 산재 피해자 가족들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산재 소송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고 있다. 고(故) 박지연 씨의 어머니도 삼성의 집요한 회유에 거액을 받고 산재 소송을 포기했다고 한 맺힌 사연을 털어냈다. 삼성은 박지연 씨의 어머니에게 민주노총을 만나지 말고 멀리 이사가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셋째, 삼성은 그동안 피해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조차 ‘영업비밀’이라며 숨겨 왔다.

삼성은 화학물질 목록, 누출사고 기록, 환자 현황 등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수많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중란 반올림 활동가

반올림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 실형 3년 6개월 선고

## 법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어 버린다



올해 초 기무사 앞에서 열린 안중현 학생 구속 규탄 기자회견

지난해 8월 5일 평택 쌍용자동차 집회장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들쭉날쭉했다.

당시 민간인을 사찰하던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는 사찰 행위가 탄로나자,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갈취당했다며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을 고소했다.

경찰은 11월 22일 출석조서에 응한 안중현 학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안중현 학생은 6개월이나 구속됐다가 지난 5월에 겨우 보석으로 풀려 나왔지만, 7월 23일에 실형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

아홉 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그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나왔다.

당시 안중현 학생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밝히는 증인들이 계속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로지 신 모 대위의 말만 믿고 강도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것은 검찰과 법원이 합심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은폐하고 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현재 안중현 학생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뜨거운데 이 사건에도 관심을 갖고 함께 싸워 주길 기대한다.

이준호 안중현 석방대책위

안중현 석방대책위원회 트위터 [twitter.com/jn\\_free](https://twitter.com/jn_free)



#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글은 이호중 교수가 '맑시즘2010 —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에서 '성범죄·싸이코패스 — 범죄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축약한 것이다. 진보진영이 감시와 처벌 위주의 범죄정책에 왜 반대해야 하는지 풍부한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이 글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쓴다.]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걸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같이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징역형 플러스 알파 정책으로 발전된 것들이 네 가지입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치료감호, 화학적 거세.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이 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 2008년부터 전자발찌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했고, 신상공개제도가 확대됐습니다. 또, 2008년에 치료감호제도로라고 해서 소아 성기호증, 성도착증 환자를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15년 동안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도입됐습니다. 2010년에는 화학적 거세가 새롭게 도입됐어요.

전자발찌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듭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를 우리나라같은 방식으로 실시하는 곳은 미국의 대여섯 개 주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외국에서는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선고할 때 여러 가지 준수 사항들을 부과하는데 가석방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에 그 준수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자발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징역형 플러스 알파 정책

전자발찌는 원래 징역형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개발된 거예요. 가능한 빨리 징역형에서 가석방을 시킨다든지 필요하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 같은 것을 선고하기 위해서였죠.

우리 나라에서는 징역형을 다 마치고 나온 다음에, '당신은 위험하니 전자발찌를 30년까지 더 채우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발찌를 활용하는 나라는 미국에서도 몇 개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상공개제도도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상 정보를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지도 검색을 연상하면 돼요. 동네 지도가 나오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들이 살고 있는 지점들이 표시가 됩니다. 클릭하면 세부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제도들은 미국에서도 몇 개 주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제도 미국의 몇 개 주에서만 실시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처럼 전자발찌 채우고, 치료감호 정책 쓰고, 신상공개도 하고, 화학적 거세까지 하는, 이 모든 제도들을 징역형에 더해서 가진 나라는 미국의 플로리다 주 정도밖에 없어요.

이 모든 제도들을 다 가진 유럽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이 제도들을 하나도 안 가진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 우리 나라가 너무 앞서 나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우리 나라와 비슷한 강성 정책들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유럽같은 데서 이런 제도들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것은 이에 비판적인 담론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언론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관해, '어

느 날 갑자기 이상한 성인 남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납치·유괴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이미지를 만듭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잘 놀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납치된다는 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위험은 사실 언론과 정부에 의해 과장되는 측면이 큼니다.

실제로 아동 성폭력 범죄의 70~80퍼센트는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가족, 친척, 동네의 또래 친구나 선배, 주민, 학교 선생님, 학교 선배 등.

지금의 형벌 정책은 범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전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가진 막연한 불안감, 공포를 배경으로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들을 만들어 냅니다.

아동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성 문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산업 구조들 속에서 성적인 욕망이나 쾌락이 산업화되고 그것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을 왜곡된 형태로 찾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왜곡된 방식들은 주로 아는 사람 사이에서 잘 나타납니다. 낯선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방식보다는 아는 사람을 유혹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식입니다.

## 신자유주의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극단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살인 사건의 대부분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살인 사건은 갈등 해결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비정상적으로 증폭되면서 나타나는 범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살인은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대응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멀쩡하게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보도합니다.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에 기반한 강성정책에 숨겨진 코드가 '위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위험 요인들을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위험 코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문화와 연결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 정책이지만, 문화적인 담론이기도 합니다. 개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지우는 식의 담론 구조들을 만들어 냅니다.

물론 근대법이 개인의 이성, 개인의 자율성을 근거로 구축된 법 담론이기는 하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 개인 책임은 초창기 근대법에서 나타났던 개인의 이성 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보다는 '당신의 주변에서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와 그 결과는 당신이 개인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사고방식과 더 관계 있어요.

범죄 문제에서도 모든 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범죄자 개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식의 정책들로 나타납니다.

요즘 과물, 짐승 같은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짐승론이나 과물론은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범죄자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낙오자

들이 제대로 적응해서 살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고가 강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 오로지 그 사람, 그 개인의 잘못이고 그 개인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돼 버립니다.

오늘날 범죄 문제 담론들은 범죄를 낳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들을 은폐하고 감추면서 개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식입니다. 이것은 물론 근대법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복지국가 담론들이 많이 해체되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담론들이 많이 와해돼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강성 범죄 정책을 유도하는 한 배경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을 짐승으로 바라보는 것과 함께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강성 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이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려고 여러

전자 발찌  
신상 공개  
화학적 거세  
치료 감호

가지 대책, 방책들이 범죄산업 형태로 나타나요. 호신용품이라든지 CCTV라든지 가정용 방법이라든지. 이것이 범죄 예방이 산업화되는 맥락이거든요.

범죄 통제를 국가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나 지역사회 단위에서 대처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거기에 상응해 범죄 예방 산업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것들이 범죄의 위험을 차별화시키는 문제를 동반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 둔 있는 사람은 경비가 잘 돼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고, 아이를 좋은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등 자기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력조차



이호중 교수



없고 지역사회 자체도 범죄로부터 위험을 예방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대부분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거든요. 보통 계층적 지위, 계급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훨씬 더 활발합니다.

내가 공장에서 일할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사장님 만날 시간은 적잖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이미 제한돼 있지요.

범죄는 바로 그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는 사실 범죄자도 하층민이고, 피해자도 하층민입니다.

절도 사건 같은 경우 부잣집에 들어가 절취하는 사건이 가끔 언론에 나오지만, 그건 매우 예외적인 사건이죠. 일반적으로 하층민과 하층민 사이에 주로 발생합니다.

## 통제

요컨대,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산업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범죄 피해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결국 자본의 힘과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위험들이 더 구조화되고 더 차별화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험 감시 정책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자발찌는 가장 전형적인

아동 성폭력을 명분으로 도입돼 갈수록 다른 범위로 확대되고 있는 전자발찌는 대표적인 감시·통제 정책이다.

감시 정책입니다. 감시하면서 축적된 정보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전자발찌는 아동 성폭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방 유괴 범죄로 확대되고 살인 범죄로까지 확대했죠. 신상공개는 성폭력에 특수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이것도 감시 정책입니다.

감시 정책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많은 정보들이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류에 의해 통제를 점점 더 강화하는 것이 위험 감시 정책입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를 계기로 지금의 형벌권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 통제 정책, 위험 감시 정책, 그리고 분류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반이 정보등록제도, 신상 정보 등록, DNA 정보 등록.

이런 감시와 통제 정책들로 인해 위험성에 따른 분류와 차별적 통제전략이 구사됩니다. 이는 사회공동체의 민주주의적 기반이 잠식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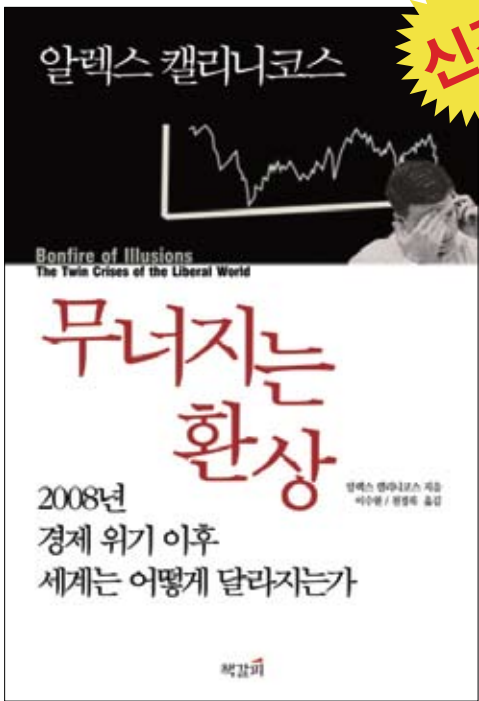
북취 오정숙





서평

# 자유 자본주의의 쌍둥이 위기



《무너지는 환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책갈피  
1만 3천 원, 240쪽

2008년 8월 초 러시아-그루지야 전쟁과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시대의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 “역사적 전환점”을 계기로 세계의 정치·경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다.

1부 “무너진 금융”에서는 금융·경제 위기의 과정과 원인을 분석한다. “위기가 금융권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원인이 꼭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태의 발단이 된 금융 붕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금융화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본다.

금융화는 금융 부문의 자율성 확대,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증대, 다양한 경제 주체의 금융시장 진입으로 봐야 한다.

단, 캘리니코스는 “금융, 특히 은행이 경제를 지배”하는 것이 금융화라는 일부 견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캘리니코스는 “생산의 동역학과 금융 현상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와 하비의 관점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가 … 단지 금융시장의 고장이 아니라 자본축적 과정 전체에서 작동하는 심각한 모순을 밝히 보여 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차원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는 장기적인 과잉 축적과 수익성의 위기다.

1949~1973년의 전후 대호황기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예외적인 시기였고, 이는 미국과 옛 소련의 막대한 군비 지출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 상승 경향이 상쇄돼 이윤율이 높게 유지된 덕분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1973년의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오랫동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1973년 이후를 위기의 시기로 설명한다고 해서 상시적 정체의 시기로 본다는 말은 아니다.” 위기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노동자 착취율 증가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윤율이 회복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가 드문드문 있었다.

## “역사적 전환점”

둘째는 만성적으로 불안정하고 구조적으로 불균형한 세계 금융 시스템이다.

전후 브레턴우즈 협정에 따라 국민 국가들이 국제 자본 이동을 규제하던 1945~1971년에는 금융 위기가 38차례 일어난 반면,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중단으로 국제 금융 제도가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한 이후 1973~1997년에는 금융 위기가 무려 1백39차례나 일어났다.

또, 지금의 불균형 상황, 즉 “미국이 금

태환이 되지 않는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는 상황”은 “어찌 보면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속되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 같고, 또 어찌 보면 이 헤게모니가 이제는 얼마나 위태로워졌는지를 보여 주는 것 같기도 하다.”

셋째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 거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른바 ‘주식시장 케인스주의’로 재화·서비스 수요를 자극하는 ‘자산 효과’가 단적인 예다. 그리고 2000년 봄에 닷컴 거품이 꺼지자 불황을 막기 위해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거품이 주식시장에서 주택시장으로 이전됐다.

이런 ‘상시 부채 경제’는 2004년 6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차입자들이 압박을 받아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서 결국 붕괴하고 말았다.

캘리니코스는 현재 경제 위기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지적한다.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다. “중국 노동자들의 낮은 소비는 중국 자본의 높은 이윤과 맞물려” 있고, 이에 따른 중국의 ‘저축 과잉’이 미국의 막대한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는 재원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경제 위기의 타격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일 뿐 체제의 근본적 모순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주요 국가들이 시장에서 비효율적인 자본들이 일소되도록 자유방임한다면 그 결과는 장기 불황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자본의 대대적 가치 저하를 막는다면 과잉 축적과 수익성의 장기적 위기가 지속될 것이다.”

물론 이런 딜레마가 있다고 해서 경기

회복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기업의 재고 비축 필요성 때문에 경제성장은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그 회복의 배후에는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한편, 이번 세계 경제·금융 위기는 지난 20년 동안 유행하던 신화, 즉 세계화의 효과로 국민국가가 쇠퇴하고 약해졌다는 신화를 깨뜨렸다. 금융권과 산업계를 구제하러 나선 것이 바로 국가였다. 이렇듯 “이번 위기에서 나타난 탈세계화 현상들은 국가와 자본 간의 세력 관계 변화를 보여 준다.”

국민국가가 자본보다 강력해지는 것이 전반적 추세다. 물론 “아직까지 세계 경제·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은 1930년대 국가자본주의만큼 멀리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방향은 똑같다.”

##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2008년은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 양상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난 해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미국의 후원을 받는 그루지야를 군사적으로 패퇴시킴으로써, 냉전 종식 이후 나토를 동쪽으로 확대해 러시아를 봉쇄·압박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좌절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그루지야 전쟁을 “새로운 냉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경제력·군사력 격차가 냉전 때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으로 미국의 초제국주의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세계적 불안정의 시대가 열렸다. 오늘날 미국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핵심이지만 경쟁자들의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 경제는 영국과 독일을 따라잡았고 머지않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축으

로서 미국을 대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려면 “지난 30년과 같은 엄청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내수를 대폭 늘려서 다른 나라들을 위한 거대한 수출 시장 구실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수출 주도형 모델”은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자본주의에 깊이 뿌리박힌, 그래서 바꾸기 어려운 계급 관계와 이해관계의 실타래에 연결돼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2위 국가와의 격차도 상당한)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지배자들은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중추적 지위를 계속 무기로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를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자본으로 이용해서 부시 집권기의 재앙들을 수습하고 미국의 세계적 지위를 새롭게 구축하려 할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 캘리니코스는 “2008~2009년의 국가 개입은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한 비상 조치였을 뿐 경제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급한 불 끄는 소방수 구실만 하고 퇴장해야 한다는 관점 때문에, 비교적 과감하다는 정부들조차 “거시적 케인스주의와 미시적 신자유주의를 혼합한 듯한 정책”을 구사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특정 형태의 자본주의의 실패가 아니다. “2007~2009년에 재앙을 몰고 온 금융 부문의 과잉 팽창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를 고통혀 온 훨씬 더 뿌리 깊고 오래된 위기, 즉 과잉 축적 위기와 이윤율 저하 위기가 다른 형태로 전이된 것이었다. 한마디로 이번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다.”

현재의 금융·경제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이수현(공역자)

# 재일조선인의 끝나지 않은 슬픔

“어떻게든 망간 광산의 역사를 남기겠다. 단바의 산골짜기에 이렇게 많은 조선인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제2차세계대전 막바지였던 1944년 일본의 망간 채굴량은 최고였고, 부족한 노동력은 조선인을 강제 연행해 보충했다.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기에 일본인들 중에서도 차별받는 부락민들이 주로 하던 일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조선인들은 힘겹게 삶을 지탱했고 망간 중독이나 진폐증 — 지은이의 아버지도 진폐증으로 사망했다 — 으로 죽거나 병을 앓으며 살아갔다.

일본이 저지른 차별과 가해의 역사를 폭로하고자 했던 지은이의 아버지 뜻에 따라 가족들의 노력으로 1989년 5월 단바망간기념관이 개관했다.

## 아소광산주식회사

이 책은 2009년 5월 31일 폐관 때까지 20년 동안 방문객 20만 명과 함께 걸 어온 ‘단바망간기념관’ 7천3백 일의 기록이고, 1934년 일본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지은이의 가족, 재일 조선인들의 이야기이다.

책에는 기념관을 준비하면서 만난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의 강제연행, 혹독한 노동, 병마, 해방 이후 일본에서의 삶에 대한 끔찍한 상황이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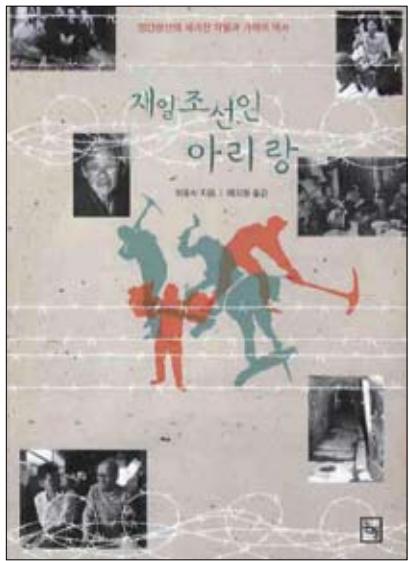
광산 관리자들은 망간이 함유된 물이 몸에 좋다며 그냥 마시게 했다. 그 말을 믿은 노동자들은 약이라며 몸에 바르기까지 했다.

망간 광산을 운영하던 아소광산주식회사는 아소 다로 전 수상과 조부가 운영했다. 오늘날 일본 정치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해방 이후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 차별과 병마에 맞서 싸워야 했던 조선인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 노동자는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이후 돈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해 계속 일본에 살아야만 했던 자신의 삶을 한 마디로 표현했다. “살면서 좋은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0년, 해방 65주년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18년째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 미쓰비시조선소 원폭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재일조선인 아리랑》  
이용식, 논형  
1만 원, 200쪽

강제연행 희생자 유골 문제, 재일조선인 차별, 야스쿠니 신사참배,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 기술을 거부하는 일본교과서 문제 등.

재일조선인 문제를 더 들여다보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어 보기를 권한다.

김애경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 다함께 사회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 서울 동부 사회포럼

#### 민주적 계획경제는 가능한가?

연사: 이정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일시: 8월 11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2강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1천5백 원)  
문의: 02-447-0397, 010-9372-2746  
http://blog.naver.com/atgforum

### 서울 남부 사회포럼

#### 마르크스주의와 인간본성

연사: 정선영 (《레프트21》 기자)  
일시: 8월 1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스타디 612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건물 6층)  
참가비: 4천 원 (학생 3천 원)  
문의: 010-2401-1987

###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 재정 위기와 한국경제

연사: 정중남 (다함께 활동가 / 투기자본감사센터 기획국장)  
일시: 8월 19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교 한성대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3분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문의: 070-8113-8541, 010-8481-2626  
http://blog.naver.com/atgblforum

### 서울 서부 사회포럼

#### 인간본성 때문에 사회변혁이 불가능한가?

연사: 정병호 (다함께 운영위원 / 계간 《마르크스 21》 편집위원)  
일시: 8월 19일 (목) 오후 8시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CYC 4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 서울 남부 사회포럼

#### [트로츠키 사후 70년] 트로츠키 사상의 오늘날 의의

연사: 최영준 (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8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스타디 612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건물 6층)  
참가비: 4천 원 (학생 3천 원)  
문의: 010-2401-1987

### 다함께 교육토론회인 월레토론

#### 학생인권조례, 교원평가 ... 학교와 민주주의

연사: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송재혁 (현직 중학교 교사)  
일시: 9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추후 공지  
주최: 다함께 교육토론회인  
문의: 010-5738-7747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 말고 “2년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화 하라

대법원

상반기에만 2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현대차 사측이 최근 울산 2공장 ‘투싼’을 단종하면서 비정규직 66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3공장에서도 1백59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1공장도 5백여 명을 해고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 외에도 주철공장, 아산공장 등에서 8백여 명이 해고될 처지다.

울산·전주·아산 등 세 공장의 비정규직지회들은 공동파업을 결의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울산·전주·아산지회 세 곳이 각각 56.6퍼센트, 79.2퍼센트, 66.2퍼센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비록 정규직 노조의 임금·단체협상이 끝났지만 상황은 나쁘지 않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원칙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들은 정규직화도 요구할 것 같다. 금속노조도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있는 작업장에서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현대차 울산·전주·아산 공장의 비정규직 지회들이 해고에 맞선 공동파업을 결의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요청하고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행동들이 성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정규직 노조가 연대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지 않고 있다. 울산 2공장의 정규직 대의원들도 연대를

외면하고 있다. 다만 2공장의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이 자발적인 잔업거부 투쟁으로 연대했다.

지금이라도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해고 반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쌍용차가 보여 주듯이 만약 비정규직 해고를 외면한다면 그 다음 차례는 정규직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장조직들과 활동가들은 비정규직 해고 반대 투쟁을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해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투쟁에 소환한 정규직 노조 지도부를 압박해야 한다.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정규직 조합원

동희오토

정규직 연대가 관건이다

기아자동차의 소형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 해고 노동자들은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기아차 사측을 상대로 지난 5월부터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퇴근 홍보전을 해 왔다.

홍보전은 정규직 노조인 기아차 화성지회와 현장조직 ‘금속노동자의 힘’, 선봉대 동지들이 수십 명씩 결합해 사측의 방해를 무력화시키며 진행됐다.

하지만 사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해고 노동자들은 해고 철화와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7월 12일부터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현대·기아 자본은 야비한 방법으로 이들을 탄압했다. 용역강패를 동원해 온

갖 욕설과 침까지 뱉으며 시비 걸기, 핸드 마이크와 자동차를 이용해 소음 내기, ‘건물 청소’를 한다며 소화전 물 뿌리기, 자동차 매연 배출하기는 물론이고 모기장과 침낭까지 빼앗고 취재하던 기자들을 폭행했다.

도발

경찰은 이런 악랄한 탄압을 자행한 사측과 용역강패들을 비호하고 동희오토 노동자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규직 노조인 기아차지부가 7월 19일부터 매일 2명씩 노숙농성에 함께하자 사측은 더는 도발을 못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조종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현대·기아차 본사 위탁

업체 해고자 농성으로 몸살”, “납품협상 왔는데 시위대가 막다니...” 등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시위가 현대·기아차와 상관없는 ‘생떼’ 시위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이런 탄압과 언론의 왜곡에도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았다. 해고자 7명의 헌신적이고 눈물겨운 투쟁은 많은 노동자들의 연대를 이끌어냈고, 7월 27일 노동자 2백여 명이 모여 촛불시위를 하는 등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도 확산됐다.

그러자 현대·기아차 사측은 농성을 철회하면 교섭하겠다는 제안을 동희오토 하청업체를 통해 금속노조 충남지부로 전해 왔다.

지난 3년간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며 해고, 징계, 미행, 협박, 고소고발 등 무자비한 탄압만을 일삼은 사측이 하청업체를 앞세워 교섭 요청을 하는 것을 보면 승리가 가능하다는 희망이 생긴다.

기아차지부의 연대가 광포한 탄압을 막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7월 29일 금속노조 집회에서도 동희오토 노동자들과 함께 사전 결의대회를 할 예정이다. 동희오토를 정규직·비정규직 단결과 승리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김우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정규직 조합원

모승훈

이주노조 단속 항의 농성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노동 형제자매”

이명박 정권은 서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올해 6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강제 추방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이에 항의해서 7월 13일부터 향린교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7월 25일부터는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7월 17일 열린 농성단 발대식에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여러 단체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가해 향린교회를 가득 메웠다.

비록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운 처지 때문에 직접 농성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버마·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이 이 자리에 함께했다.

또 이 자리에는 마침 ‘미등록 이

주노동자와 경제 위기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려고 한국을 방문한 아시아 활동가 20여 명이 함께해 힘을 실어 줬다.

그중에는 한국에서 10여 년 이상 이주노조에서 활동하다 본국에 귀국해 국제적 이주노동자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필리핀 활동가도 있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지 말했다.

나와 건설노조에서 활동하는 다함께 회원들은 진보포럼 ‘맑스즘 2010’에서 이주노조 위원장과 함께 농성 투쟁 기금 마련 모금을 했다.

많은 내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우리의 일 자리를 빼앗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

나는 이주노동자들과 기꺼이 연대하려는 노동자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고 내국인 노동자들이 꺼리는 일을 해 온 우리 노동 형제·자매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근거도 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테러리스트 취급하며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분열시키려 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주노동자들을 먼저 탄압하고 다음에는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 등 모든 노동자들을 공격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주노동자 탄압에 반대하는 투쟁에도 적극 연대해야 한다.

박재순 건설노조 수도권본부 북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

전교조

정부의 규약 개정 강요를 거부할 것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공격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시국선언·민주노동당 후원 등을 이유로 교사들을 징계한 것도 모자라, 전교조의 규약까지 문제 삼았다.

노동부는 해직 교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노조의 민주적 의사소통 절차들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한다.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와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다.

실사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한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교조가 내부 결정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다.

이명박의 전교조 공격 방향은 뚜렷하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전교조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경제 위기 속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

려는 이명박은 전교조를 눈엍가시로 여긴다.

실제로 2010년 교육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조 원 넘게 축소됐다. 정부는 교육의 책임을 개인 간 경쟁에 맡기고 있다.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 간, 학교 간 경쟁을 강화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들의 경쟁을 부추긴 것은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 교육에 반대하는 핵심 세력인 전교조가 견제하고,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 6명이 당선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명박은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정치 위기 속에 이명박은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존속

한 전교조 규약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이명박의 곤궁한 처지를 드러내 줄 뿐이다.

조합원 명단 공개로 전교조를 고립시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던 시도는 오히려 조전혁이 1억 5천만 원 벌금형을 판결받으면서 실패했다.

규약 시정명령 역시 한 편의 희극으로 끝나게 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여당은 서로를 꺾아 먹으며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다. 이명박이 위기인 지금이 이명박의 탄압에 맞서 싸움을 시작하기 좋을 때다.

전교조는 8월 1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며 이명박에 맞서는 하반기 투쟁을 결의할 것이다.

김성보 전교조 대의원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KBS본부 파업

# 사측이 새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다

〈레프트21〉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인 7월 28일 현재 28일째 이어진 언론노조 KBS본부 노동자들의 파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노조는 사측과 잠정 합의하고 29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정방송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하는 등 새 노조의 실체 인정을 요구해 온 노동조합의 핵심적 요구가 반영된 듯하다.

다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잠정합의안에 '수신료 현실화' 지지가 담겨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쉬움이 남는다. 적지 않은 조합원들뿐 아니라 KBS본부 파업을 지지해 온 많은 사람들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파업이 불법이라며 복귀하기 전에는 논의할 수 없다던 사측이 양보한 데에는 무엇보다 장기 파업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조합원들의 결속과 자신감이 중요했다.

사측은 4차에 걸쳐 복귀명령을 내리고 무노동무임금과 징계 위협을 했지만 파업 복귀자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파업 이후 조합원이 꾸준히 늘어 1천 명을 돌파했다.

파업 내내 파업 대오의 사기가 매우 높았다. 한 노조 간부는 이번 파업이 "KBS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파업 참가율과 열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KBS본부 조합원들



사진: 이원호

7월 28일 열린 KBS 3차 파업 문화제 — KBS본부 노동자들은 단호한 파업으로 사측의 양보를 얻어냈다.

대부분은 파업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파업을 유지했던 이유는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2년간 억눌려 온 분노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다.

시민들의 지지도 중요한 구실을 했다.

KBS본부가 호소한 집회에 시민들 수백 명이 참가하고, 웹사이트에는 매일 수십 개의 응원 글들이 올라왔다.

반면 사측은 수신료 인상 논란과 블랙리스트 파동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대체인력을 투입

해 제작한 프로그램이 잘 저하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는 등 말썽도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사측에서 제기한 단협가처분이의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KBS 새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말해 온 사측의 주장을 법

원조차 부정한 것이다.

KBS본부의 파업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KBS본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새 노조의 실체를 인정받고 단협을 체결해 이후 활동의 발판을 만들고자 했는데, 지난 한 달여 파업투쟁으로 KBS본부가 김인규에 맞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을 훌륭히 입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늘고 있는 조합원들의 수가 이를 보여 준다.

## 반격

사측이 후퇴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방송 통제 정책에 파열구가 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버텨 왔지만 조합원 수가 1천 명을 넘어서고 한 달간 파업을 해 온 새 노조를 사측이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KBS 파업은 지방선거 이후 자신감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투쟁을 조직해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특히 노동자들이 노조 인정과 단협 체결 요구와, 공정 방송이라는 정치적 요구를 연결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 줬다.

KBS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미 KBS 내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최근에는 KBS 수신료를 징수하는 언론노조 KBS자원관리지부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마치고 쟁의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조명지

## 최저생계비 인상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결정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고 보육료 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많은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에 그쳐 '죽지 않을' 수준밖에 안 된다.

한국통계학회가 발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최종보고서」를 보면 국민층의 월평균 의식주 비용이 65만 원이다. 결국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은커녕 국민층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래서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최저생존비라는 얘기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 최저생계비는 지난 10년 동안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로 배열할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수준) 대비 45퍼센트에서 34퍼센트로 곤두박질쳤다.

## 아까워

정부는 이조차 아까워서 어떻게 해서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줄이려 한다. 부양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한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국가의 책임을 개별 가정에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수급자는 10년째 전체 인구의 3퍼센트밖에 안 되고, 빈곤층인데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4백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4퍼센트에 이른다.

정부는 3년마다 소득·지출 수준과 생활실태 등 계층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

를 정하고 그렇지 않은 해는 물가인상을만 반영한다. 올해는 계층조사를 하는 해로,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려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2007년 계층조사 당시 정부는 양말 1년에 4결레, 운동화 2년에 1결레, 팬티 3년에 6매만을 인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한 끼 밥값은 2천1백 원이다.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하루하루가 '무한도전'인 것이다.

최저생계비 체형 캠페인에 참가한 한 나라당 의원 차명진은 하루 식비 6천3백 원으로 "황제의 식사"를 했으며 "돈 몇 푼 올린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지배자들이 하층계급의 삶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심지어 경멸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을 봐도 그렇다. 정부는 최저



한나라당 의원 차명진의 "황제의 식사" 1년 내내 그렇게 먹어 버려.

생계비 인상을 주장하는 진보단체들을 배제했다. 대신 '자유시장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나 양성평등실현연대 같은 보수단체로 바꿨다.

이들은 최저생계비를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베풀어야 하는 시혜즘으로 여

긴다. 부자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감세를 해 주면서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쓸 돈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돈은 있다. 그 돈을 부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인상하라.

박건희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6호 (2010년 여름)

정기구독 문의  
02-2268-7608  
www.marx21.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106-6 2층(100-272)  
전화 02-2268-7608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이메일 marx21@marx21.or.kr

〈초점〉  
천안함 사건을 통해 본 동아시아 질서 변동과 한반도 \_ 김하영  
유럽의 위기와 저항 \_ 알렉스 캘리니코프  
낙태 윤리 논쟁과 낙태권 운동 \_ 최규진

〈특집 1: 경제 위기와 중국 모델〉  
갈릴릴레 선 중국 경제 \_ 이정규  
'중국 모델'을 둘러싼 최근 좌파들의 논의 \_ 김용욱

〈특집 2〉  
신자유주의와 대하 구조조정 \_ 알렉스 캘리니코프  
〈현대 진보사상 조류〉  
정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 존 롤즈 〈정의론〉 읽기 \_ 최일봉

〈시리즈 기획 한국경제2〉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 \_ 강동훈  
〈마르크스주의와 역사〉  
한국전쟁, 누구의 전쟁인가? \_ 한규한

〈서평〉  
노회찬 외, 〈리얼 진보〉 \_ 정병호  
키어런 앨런, 〈막스 베버의 오만과 편견〉 \_ 이현주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1년여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0,000원  
□ 2년(52개 호) 100,000원

입금 계좌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레프트21에서 접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